생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 포럼)

민선 7기 전반기
문화정책 진단 및 발전방안

□ **일시 : 2020년 6월 24일 (수) 오후 3시**

□ **장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

□ **주최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 **주관 :** 쌍채북춤보존회 내드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사)광주영상위원회, (사)대동문화재단, 극단 연인, 광주장애인미술협회, (사)윤상원기념사업회,,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오월어머니집, 만랩백수, 문화기획단 유별라, 버틀러스코리아, 안다미로, 오로지스튜디오, ㈜와사비아, 청년문화허브, 청년미래전략센터, 잇다, 축제 문화기획 그룹 F.E.A.T, 툴아이피 1%공작소, 동네줌인, 와이트랩, 청년유통지원협동조합, 플리마코, 놀이패 신명, 영상분과, 극단 깍지, 광주민족미술인협회, 광주 · 전남 작가회의, 내벗소리민족예술단, 극단 토박이, (사)오월음악, 한국현대사진가협회, 춤추는나무,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씨쏘뮤지컬컴퍼니, 푸른솔합창단, 빛고을 풍물두레 물들꽃

□ **후원 :**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 프로그램

사 회 : 송진희(호남대학교 교수)

발표	김준영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서순복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	
토론	이순학 (상상실현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패널	이현미 (광주민예총 사무처장) 김종필 (광주문도협 협동사무처장)	박상현 (상상실현네트워크 사무처장)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목 차

1. 발 표 (1) 김준영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 05

2. 발 표 (2) 서순복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 ---------- 19

3. 토 론 (1) 이순학 상상실현네트워크 공동대표 ---------- 39

4. 토 론 (2)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 45

5. 패 널 (1) 이현미 광주민예총 사무처장 ---------- 53

6. 패 널 (2) 박상현 상상실현네트워크 사무처장 ---------- 57

7. 패 널 (3) 김종필 광주문도협 협동사무처장 ---------- 59

8. 패 널 (4)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63

발표문 :

「품격있는 문화 일류도시 광주」를 위한
민선7기 2년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김 준 영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품격있는 문화 일류도시 광주」를 위한
민선7기 2년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김 준 영(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금년 6월은 민선7기가 출범한지 2년째를 맞이하게 된다. 광주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문화 분야 로드맵 구상에 착수하여 작년 1월 23일 '민선 7기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을 확정·발표하여 '**품격있는 문화 일류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종 세부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위상과 광주다움을 회복하고 품격있는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이슈 등의 해결방안 모색의 구심체 역할을 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8일 발족식과 함께 민선7기 후반기 문화정책 14대 중점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족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민선7기 후반기 문화정책의 민·관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으며, 광주 미래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예술인들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교류의 창구 역할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광주문화공동체 형성 역할,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광주의 문화예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등을 발굴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우선 민선7기 문화정책의 특징은 문화행정의 창의성, 전문성, 일관성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문화경제부시장 직제**'를 신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광주 문화발전의 조직역량을 강화와 함께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문화정책 추진방향과 시책발굴을 위해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체육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화난장 토크**'와 '**예술의 거리 토론회**' 그리고 문화와 경제 분야의 민·관·학·연 협치 기반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주 문화·경제 거버넌스 포럼**' 구성 등 문화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다양한 문화 주체들의 참여를 토대로 문화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 민선7기 2년의 주요 성과〉

민선7기 2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문화경제부시장 직제 신설, 실질적 문화정책 추진]

문화정책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담당할 **'문화경제부시장'** 직제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설하여 다양한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성사업**의 **추동력 확보**에 **노력**하였다.

* 시-문화체육관광부–문화전당 간 정책협의회 정례화
* 시-시의회-시민사회단체-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간 협의체 운영
* '15년 문화전당 개관 이후 최대 국비 확보('20년 1,130억원)
* 현 문화전당 운영체제 유지를 위한 아특법 시행령 개정.공포('20.3.31.)

13년 동안 표류해왔던 '**광주문학관 건립**' 문제를 지역 문학계와의 소통을 ('18.12월) 통해 부지를 확정하여 순조롭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 기간/규모 : 2019 ~ 2022년 / 연면적 2,730㎡(지상4층)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깃든 전일빌딩을 4년간의 리모델링 통해 시민역사문화공간으로 새 단장하여 '**전일빌딩245**'로 5·18민주화운동의 명예와 긍지를 상징하는 장소 및 광주문화콘텐츠의 허브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20.5.11.)

[그림 1] 전일빌딩 현황 및 조감도

그리고 도심대표 혐오시설인 상무소각장을 지역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복합문화시설로 구축하는 단계별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1단계로 대표도서관을, 2단계는 공장동을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가는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시립도서관이 없었던 서구와 광산구에 '23년까지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면 '**1자치구 1시립도서관**' 시대를 개막할 수 되었다.

* 서구 : 광주대표도서관('17~'22) / 광산구 : 하남지구시립도서관('19~'23)

(4차산업을 선도할 AI기반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ICT 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한 문화콘텐츠, 게임, AI 등 문화산업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조성**'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였다.

*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착공('19.9월)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 공모 선정 및 공사 추진('19.~'20.)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건립 추진('17.~'21.)

*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20.4월)

* 미디어플랫폼(유튜브 등) 영상콘텐츠 창작인 발굴 및 제작 지원(매년)

[그림 2]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AMT) 조감도

(문화가 일상이 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광주를 찾는 방문객 및 시민이 전통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국악상설공연**'을 **지역대표 공연**으로 **브랜드화**하여 예향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 최초공연 '19.3.2.~ / 주 5회 / 광주공연마루 / 창극, 국악난장, 무용 등 국악공연

이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보조사업 지원이 관행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확보하고자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보조금에 대한 통합**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계의 자생력 확보와 역량강화 및 문화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 문화예술 분야 통합 공모	:	3건 27.4억원
· 문화예술(미술, 사진, 서예, 장애인 문화) 진흥지원	:	4.9억원
· 공연예술(전통, 무용, 연극, 대중음악, 클래식, 다원) 진흥지원	:	20억원
· 문학진흥(시, 수필, 문학 등) 지원	:	2.5억원

그리고 **아트피크닉**, **대인예술야시장**, **예술의 거리**, **프린지페스티벌**, **충장축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에 힘썼으며, 그 결과 전통시장에 문화예술을 접목한 대인예술야시장 '**별장**'은 '**2018 한국관광의 별**' 및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어 새로운 명소로 부각하였고, 또한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거리축제가 열리는 문화난장"이 2년 연속 우수프로젝트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광주만의 독특한 매력이 넘치는 온리원(Only-One) 관광상품 개발·운영)

5·18민주화운동 40주년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집중마케팅**으로 광주의 가치를 전국 및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창제작 4작품, 국내외 공연 13회)
* 5 · 18 40주년 기념 특별전 서울전 '민주주의의 봄' 전시('20.6.3.~7.5)
* 5 · 18 40주년 기념영화 특별시사회 '아들의 이름으로' ('20.5.15.)

그리고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후 첫 평가심사에서 '매우만족'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연속 선정('19.5월) 되어 창의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고, 광주톨케이드에 세계 최초 비정형 미디어아트 작품인 '**무등의 빛**'을 설치하여 광주다움을 알리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수행과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제문화교류도시**로서 **역량** 및 **위상**을 높였다.

* 광주지역 7대 권역 미디어아트 시설물 설치 및 페스티벌 개최('18.~'21.)
* 광주 관문(광주톨게이트)에 '무등의 빛' 미디어아트 조형물 설치('19.~'20.)
* '2019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개최('19.6.22.~6.28. / 36개국 489명 참가)
* '2019 아시아-유럽 창의혁신도시연대 시장회의' 개최('19.10.27.~10.29. / 14개 도시 참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지난 3년간 '박물관 개보수 및 역사공간 구축' 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 보수와 기존 민속전시실 개편, 광주근대역사 전시공간을 추가하고, 항일운동의 선봉인 호남의병 활약상과 5·18민주화운동 자료 전시 등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광주역사민속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개관했다.('20.5.27.)

그리고 신한류 문화 확산을 위한 '**케이팝(K-POP) 스타의 길 조성 및 도심관광 트레일**' 등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전국 최초로 공연과 이야기가 결합된 광주만의 매력이 넘치는 시티투어를 운영하여 광주만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였고, 관광 전담조직 설립(광주관광재단) 추진으로 광주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심관광 도보트레일('19. 2.~) / 동명동 스탬프 투어('19. 5.~)
* 테마형 시티투어('19. 4.~) : 광주100년 이야기, 오월의 버스
* 케이팝(K-POP) 스타의 길 조성('19.~'20.) : 충장로·금남로 일대
*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아시아음식점 12개 업체 입점, 아시아컬처&푸드페스티벌 개최 등)

이와 함께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18.8월)되어 광주가 국제회의 산업 유치 및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춤으로 마이스(MICE)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신축을 통해 마이스(MICE)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김대중 국제회의복합지구 브랜드 구축 및 국내외 홍보사업, MICE아카데미 운영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끝으로 유래가 없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전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시에서는 문화·예술·관광분야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청정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였다.

* 문화·예술·관광분야 행사자제 등 방역대책 마련 추진 : '20.2.3.~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예술시설 단계적 개관 추진 : 48개소(공공 39, 민간9)
  · 문화예술행사 연기·중단 : 223건(국악상설공연, 미스트롯. 전시회 등)
  · 문화·관광·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 홍보 및 지속적인 점검('20.3.8.~/5,766개소)으로 시민의 안전 및 광주공동체 보호에 최선
* 특수고용직(예술인) 등 생계비 지원책 마련(최대 100만원)
* 코로나19 극복 예술프로젝트(비대면) 시행
  ·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안방예술극장 오픈 : '20.3.26.~
  · 온라인으로 보는 광주국악상설공연 개시 : '20.4.3.~
  · '코로나19 극복 응원송' 3종 제작 등

〈 민선7기 문화분야 향후 핵심정책 〉

향후 2년 중점과제별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 지역문화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중심도시

'지역문화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중심도시' 분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환경 조성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문화공간 구축 ▲문화가 있는 광주형 생활문화 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확산** 등으로 지역을 대표하고 광주다움을 드러내는 문화기반시설 조성과 생활문화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환경 조성'**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 및 5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이와 함께 아특회계 신규 국비사업 반영 확대 등으로 조성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겠으며,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문화공간 구축'**은 광주대표도서관('17.~'22.), 하남지구 시립도서관('19.~'23.), 동명동 문화마을('19.~'22.), 광주문학관('19.~'22.), 비엔날레관전시관 신축('19.~'24.),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17.~'21.) 조성 등을 통해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거점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통한 문화공간 확충으로는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19.~'24.),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사업('20.~'22.), 임동 문화·예술창작센터('19.~'21.), 전일빌딩245 랜드마크화, 사직공원 상설공연장('20.~'22.)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으로는 희경루 중건('18.~'22.), 신창동 유적 선사체험 학습관('18.~'21.), 호남의병 기념관('20.~'24.) 정율성 생가 정비('18.~'21.), 아시아 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20.~'23.)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가 있는 광주형 생활문화 구현'으로는 국악상설공연 전국화, 전국 국악인 등용문 임방울 국악제, 대한민국 국악대전 추진 등과 함께 국립광주국악원 유치로 지역전통문화 저변을 확대하여 국악 대표도시로서 도약을 착실히 준비하고, 광주비엔날레, 아트광주, 미술대전 등 각종 미술행사와 연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함께 창작에서 판로개척까지 미술발전 생태계 조성으로 광주미술의 성장사다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진·기성 작가지원, 문학단체 활성화 및 문학네트워크 구축, 문학 독자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문학거점 역할을 할 전국 최고 수준의 문학관 조성·운영을 통해 인문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장르별 특성에 맞는 보조사업 지원 및 정책화로 문화예술분야 민간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확산' 정책은 찾아가는 예술공연 확대 및 아트피크닉, 시향공연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을 통해 '광주 365 문화공연'을 확대하고, 생활문화지원센터, 문화원, 문화예술단체, 각종 동아리 지원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안·밖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취약계층 등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예술교육으로 체험하는 예술교육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엔날레 시각이미지 개선사업, 아시아 예술정원 등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공예술 명소도 만들 계획이다.

○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관광도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관광도시' 분야는 **▲광주만의 특색있는 대표축제 육성 ▲관광기반 환경 조성 ▲맛과 멋, 흥 그리고 정(情)이 넘치는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우리지역의 매력자원을 활용한 관광브랜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만의 특색있는 대표축제 육성'은 **투 트랙(Two Track)** 전략으로 한 축은 광주의 빛을 밝히는 미디어아트 놀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및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사업의 본격 추진과 함께 대인예술야시장, 예술의 거리 등 각종 축제와 연계 추진하여 '**미디어아트 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가고자 한다.

다른 축은 국내 대표 거리축제인 '충장축제'와 '프린지 페스티벌' 등과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굿모닝 양림축제'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모색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축제**의 **전국화·세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축제평가단 운영,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등으로 축제의 자생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관광기반 환경 조성'으로는 관광정책 수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광주관광재단을 금년 7월경에 설립할 계획이며, 어등산 관광단지의 재공모를 통해 금년 안에 민간개발자를 선정하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등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와 남도관광센터의 본격 가동, 아시아음식문화지구 활성화 등 경쟁력 있는 관광기반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맛과 멋, 흥 그리고 정(情)이 넘치는 관광상품 개발'로는 5.18 민주화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등을 현장극으로 구현한 역사문화관광투어 상품 운영과 남도음식의 맛깔스런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미식관광투어 운영 등 '이야기가 있는 테마형 시티투어'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광주 전통문화 체험과 야간 투어, 인근 시군의 자연 관광자원과 연계한 '빛고을 남도투어'와 '풍류남도 나들이' 등 관광 상품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광주문화관광의 캐릭터인 '오매나'를 유튜브, SNS 등에서 펭수에 버금가는 우리시의 대표 캐릭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 첨단기술 기반에 가치를 더하는 문화산업도시

'첨단기술 기반에 가치를 더하는 문화산업도시' 분야는 **▲문화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확충 ▲광주産 문화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문화기업 유치 및 마케팅 강화 ▲AI시대 대비 문화산업전략기획단 운영** 등으로 문화산업을 광주의 성장 엔진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확충'**으로는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유치를 지속 추진하고, 실감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가 될 광주실감콘텐츠 큐브는 '22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광주産 문화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여가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본격적인 운영과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유치 등 체감형(VR) 게임 개발 및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게임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송정역~극락강역~광주역을 운행하는 셔틀열차 안에 5G기반 실감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여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전일빌딩245 내에 문화콘텐츠 기업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개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춘 광주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과 AR/VR 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체험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기업 유치 및 마케팅 강화' 방안으로는 금년 4월 문화산업 분야 등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권역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기업들에게 투자하는 지역특화 펀드 결성(3호)을 통해 콘텐츠 개발 및 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에 제공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여 첨단과학기술을 연계한 융복합의 문화콘텐츠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산·관·학·연 협의체인 **'문화산업전략기획단'** 운영을 통해 광주 문화산업의 중장기 전략 및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맺음말 〉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선 7기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품격있는 문화 일류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도시 곳곳을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문화산실로 조성하여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 되고 역사가 되는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과 문화예술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문화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하였고, 광주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립예술단의 중장기 발전목표 수립과 대표 브랜드공연 육성방안 마련 등 시립예술단이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서비스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비하여 광주문화예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문화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력 확보를 위해 금년 6월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문화정책에 반영하는 통로로 활용하여 민선7기 후반기 문화정책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관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겠다.

R&D 기반 국책기관인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 유치 지속 추진**과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전략 등을 선제적으로 정부에 제시하여 정부의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동력 지원 및 문화중심도시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또한 우리 시의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문화산업전략기획단의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산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만들어 21세기 미래형 도시발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국책사업임에도 그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축소로 문화전당 건립 이외에는 5대 문화권 등 문화적 도시환경 사업 등에 국비지원이 미흡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지역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전당 현 운영체제 유지**와 **아특법 유효기간 5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아특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를 향유개념으로 국한하지 않고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상품화, 브랜드화, 산업화하여 문화가 광주 미래를 견인하고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미래먹거리를 더욱 발굴하면서 '**made in 광주문화**', '**예향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문화예술**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디지털화**에 더욱 관심을 갖는 등 새로운 문화 트랜드(trend)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문화 일류도시 광주**'의 품격을 높여나갈 것이다.

참고 문화정책의 비전과 4대 목표, 14대 중점과제

비전 품격있는 문화 일류도시 광주

4대 목표

1. 지역문화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중심도시
2.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관광도시
3. 첨단기술 기반에 가치를 더하는 문화산업도시
4. 스포츠를 통해 문화생활을 누리는 문화체육도시

14대 중점과제

지역문화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중심도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관광도시	첨단기술 기반에 가치를 더하는 문화산업도시	스포츠를 통해 문화생활을 누리는 문화체육도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환경 조성 ●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문화 공간 ● 문화가 있는 광주형 생활문화 구현 ●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확산	● 광주만의 특색있는 대표축제 육성 ● 관광기반 환경 조성 ● 맛과 멋, 흥 그리고 정(情)이 넘치는 관광상품 개발	● 문화콘텐츠산업 新성장동력 확충 ● 광주産 문화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문화기업 유치 및 마케팅 강화 ● 인공지능(AI)시대 대비 전략기획단 운영	● 생활속에서의 스포츠 여가체험 ● 경쟁력 있는 전문체육 육성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사업 추진

(2020. 6. 8. 수정계획 발표)

발표문 :

광주 지역문화정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접근
- 민선 7기, 2주년을 맞이하여-

서 순 복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

광주 지역문화정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접근
- 민선 7기, 2주년을 맞이하여 -

서 순 복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지자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지역마다 뚜렷한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현실적 상황에서 문화와 관광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삼지 않을 수 없고, 자치단체마다 최소 몇 개정도의 축제를 개최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은 2013년 말 제정되어 2014년부터 발효된 두 개의 법률, 즉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다.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은 2003년 9월 처음 논의가 이루어진 이래 10년 이상의 진통을 겪으면서 제정된 법률로, 우리나라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진흥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 가장 많이 쓴 낱말이 문화이며, 문화는 다양하고 포괄적 개념이다. 한마디로 '문화는 이것이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2014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제3조)에서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고 정의하였다. 이어서 문화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문화권을 천명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4조).

문화는 협의로는 예술 및 정신적 산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만, 광의로 본 문화 개념에서는 상징체계 및 생활양식과 행동방식을 말한다. 국제적인 문화협력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유네스코에서는 광의의 문화 개념을 따를 것을 권장해오고 있다. 유네스코는 문화지표 속에 문화유산, 인쇄물, 문예, 음악, 공연예술, 조형예술, 영화, 사진, 방송, 사회문화 활동, 체육, 오락, 자연과 환경보호에 관련된 활동을 포함시키고 있다(Horowitz, 1983). 한국 유네스코의 문화지표에서도 문화유산, 문학, 조형예술, 디자인,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회문화적 활동, 대중매체, 여가활동, 국제문화교류가 포함되어 있다. 문화는 배부른 자나 유한계급의 전유

물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가 되었다. 또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무너지고 장르 간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서로 다른 문화가 뒤섞여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문화란 의식(가치.지식), 행동, 사물(성과물)이 이룬 체계이며, 문화를 넓은 의미로 볼 때 이를 '삶의 체계', '생활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세상 모든 사회에는 문화가 있다. 원시사회에서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와 사회에 문화가 있어 왔다. 그리고 이들 자원의 구성단계를 생각해보면, H/W 이전에 S/W가 있고, S/W 이전에 H/W의 불가결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기 위한 제반 가치의 일이고, humanware, software, hardware 차원의 제반 단계를 좇아 구축되어가야 한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지역 차원의 담론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 지역의 문화 창조력 증진,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의 이미지 형성, 지역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문태현, 1996: 771-772). 지역문화는 지역과 주민, 그리고 역사의 복합체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총체로서, 지역문화에 대해서는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다(김홍석, 2002: 5).

지역문화라는 말에 대하여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구체적인 생할기반인 지역의 자연적.역사적.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 만족을 얻기 위한 활동의 소산이나 그 과정으로 본다고 하였다(2001 지역문화의해 추진위원회, 2001: 14). 지역문화는 완성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새로이 정립되어가는 과정의 개념이다(김승환, 2001: 13)[1].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표된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에서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대표과제로 지역문화자치를 위한 기반조성,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지역문화 거점기관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문화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문화비전 2030, 2018: 240).

문화정책은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부문에 개입하는 일련의 행위 및 상호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박광국 외, 2000: 136). 문화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근래에는 문화정책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고급예술, 민속예술을 넘어 대중문화까지 문화정책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예술가 등 생산자 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정책영역과 수단이 전환되고 있으며, 예전에는 문화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민의 생활환경

1) 지방이나 향토라는 말 대신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을 이분화하는 봉건적 개념을 탈피하고, 중앙권력의 독점과 지배를 용인하지 않고, 문화의 독점성.배타성 그리고 중앙집권을 해체하려는 의지이다.(김승환, 2001: 13). 서울도 하나의 지역이다.

즉 의식주.주거환경.도시건축.공공시설 등이 새로운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다.(지금종외, 2002: 23).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한지 다시 30년이 다 되었다. 민선7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시간이 개인 인생과 조직에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정기간을 단위로 모니터링해보고 중간점검해서 정책집행과정상의 실태를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민선7기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지역에서 전개된 지역문화정책의 운영에 대하여 문화권의 개념적 구성요소인 문화향유, 문화활동 참여, 문화 창조라는 3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고는 충분한 자료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탈고되었기에, 추후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탐색적 연구(exploratory research)로서 시론적인 성격을 띤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책자료를 참고하고 필자의 생각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지역문화정책의 발전과정

문화정책에 대해서 문화가 '좋은 것'(good thing)이고, 다양한 공공혜택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문화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를 찾고 있다(Heilbrun & Gray, 2001: 219-244). 이는 문화예술이 민족정체성 정립, 국가위신 제고, 사회통합, 삶의 질 향상, 사회발전,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공공편익을 창출한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행정의 무간섭주의가 문화정책의 기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무정책과는 다르다. 문화정책에 대한 지방정부개입의 정당성은 지역문화의 발전과 보호 측면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다(이원태, 1995: 134). 지역문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개입의 정당성은 정책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인 문화창작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복지적 측면에서 문화수요의 충족을 위한 정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역사에 있어서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해방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한정된 것이었다(임학순, 2002: 270). 정부는 1980년대부터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문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임학순, 1994: 199). 그리고 1995년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문화가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 들어서 추진된 지역문화정책은 문화의 지방화시대 실현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이라는 정책방향 속에서 전개되었다. 문화예술가들의 창작여건 조성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관제성 전시문화를 지양하고 지역.계층간 문화격차 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소외계층과 서민중산층을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수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문화의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향토문화개발 등 문화의 지방화 실현에 노력하였다(문화관광부, 2002a: 343-344). 2001년의 "지역문화의 해" 사업 실시, 지방문예회관 운영의 국고지원 확대, 지역문화예술제 개최의 적극적 지원,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화, 지역문화정보시스템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부터 "우리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였다.

2020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중앙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유관 기관 단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혜자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에 따라 ▲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이라는 4개의 전략과 15개의 핵심과제를 도출했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2.10).

III. 민선7기 2주년 광주 지역문화정책 평가

1. 광주시민의 문화향유 차원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하여 민선 7기 출범 이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 우리나라 지자체 최초로 문화경제부시장 직제를 신설('18.7월)하여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민선 7기 문화정책 방향 및 시책 등 추진을 위해 문화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품격있는 문화도시 광주 비전을 선포하였다('19.1월)[2] 그리고 광주를 찾는 방문객 및 시민이 전통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국악상설공연을 지역 대표 공연으로 브랜드화하여 예향도시의 광주의 이미지 제고하였다[3] 그리고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2) '품격있는 문화 일류도시 광주' 실현(4대 목표 10대 중점과제), 문화경제거버넌스 포럼(3회) 및 현장 의견청취의 장「문화난장 토크」등 개최.

3) 최초공연은 '19.3.2부터이고, 매주 화~토(주5회) 17:00부터 광주공연마루에서 창극, 국악난장, 무용

도시로 지정된 이후 첫 평가심사에서 '매우만족'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연속 선정되어('19.5월) 창의도시로서 발전을 도모하였다[4]. 한편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깃든 전일빌딩을 4년여 동안 리모델링하여 시민역사문화공간으로 새 단장을 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였다('20.5). 또한 지난 13년 동안 표류해왔던 '광주문화관 건립' 문제를 지역 문학계와의 소통을('18.12월) 통해 부지를 확정하고 건립을 추진하였다[5]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없었던 서구와 광산구에 2023년까지 시립도서관을 건립토록 확정하여[6]('18.7월) 1자치구 1시립도서관 시대를 개막하였다. 나아가 실감콘텐츠, 게임 등 문화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를 착공하고('19.9월),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 구축사업을 공모 선정하였으며('19.5월),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를 확대지정하였다('20.4월). 그리고 전국 최초로 공연과 이야기가 결합된 광주만의 매력이 넘치는 시티투어를 운영('18.8~)하여 광주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7],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18.8월)되어 광주가 국제회의 산업 유치 및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8].

한편 저비용·고효율 성공모델을 제시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191개국 12,821명 참가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전국체전 10위, 장애인체전 8위, 광주FC 1부 리그 승격 등 전국대회 역대 최고 성적 거양으로 광주 체육의 우수성을 확인한 바 있다.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산단 내 개방형 체육관, 축구전용구장 조성 등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도 확충하였다.

이렇게 민선 7기 광주광역시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그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왔다. 문학관 문제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였고, 전일빌딩 리모델링은 긍정적 측면이 많다. 거기 입주한 단체들이 518 정신을 창달하느냐의 문제가 남았다.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9],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의 4대 분류에 28개의 문화지표를 적용해 진행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문화 종합

등 국악공연을 한다.

4)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건립('17.~'21)과 광주지역 7대 권역 미디어아트 시설물 설치 및 공연('18.~'21).

5) 기간 및 규모는 2019 ~ 2022, 연면적 2,730㎡(지상4층)이다.

6) 서구 : 광주대표도서관('17~'23), 광산구 : 하남지구시립도서관('19~'23)

7) 테마형 : 광주100년 이야기, 오월의 버스

8) 김대중 국제회의복합지구 브랜드 구축 및 국내외 홍보사업, MICE아카데미 운영.

9) 약간 오래된 자료여서 민선 7기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국규모의 조사자료이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용한다.

지수'는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전북 전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중에서는 경북 성주군이 가장 높았고, 구 지역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가장 높았다(문체부 보도자료, 2019.3.13.,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158)[10].

<표>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율

		평균(%)	표본오차(%)	신뢰구간(%) 신뢰하한	신뢰상한	상대표준오차(%) (relative standard error)
전체		81.5	0.9	80.7	82.4	0.5
성별	남성	80.9	1.2	79.6	82.1	0.8
	여성	82.2	1.2	80.9	83.4	0.8
연령	15-19세	96.1	1.6	94.6	97.7	0.8
	20대	97.1	0.9	96.1	98.0	0.5
	30대	91.6	1.7	90.0	93.3	0.9
	40대	89.0	1.6	87.4	90.7	0.9
	50대	79.4	2.0	77.4	81.5	1.3
	60대	64.7	3.0	61.6	67.7	2.4
	70대 이상	46.9	3.6	43.3	50.5	3.9
시도	서울	90.0	1.9	88.1	91.8	1.1
	부산	80.0	3.2	76.7	83.2	2.1
	대구	79.2	3.4	75.7	82.6	2.2
	인천	85.3	2.9	82.4	88.2	1.7
	광주	69.9	4.4	65.5	74.3	3.2
	대전	86.3	3.2	83.2	89.5	1.9
	울산	76.8	4.7	72.2	81.5	3.1
	세종	92.2	3.7	88.6	95.9	2.0
	경기	83.0	2.2	80.8	85.2	1.4
	강원	89.5	2.9	86.5	92.4	1.7
	충북	84.1	3.5	80.7	87.6	2.1
	충남	85.5	2.9	82.5	88.4	1.7
	전북	65.6	4.3	61.2	69.9	3.4
	전남	63.1	4.5	58.6	67.6	3.6
	경북	64.9	3.8	61.1	68.7	3.0
	경남	80.2	3.4	76.8	83.6	2.2
	제주	76.7	5.4	71.3	82.1	3.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2018: 135

10) 문화예술행사별 관람율 변화 추이(2016년 대비 2018년 자료)를 보면 분야별 관람률은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상승했다. ▲ 대중음악/연예는 6.5%포인트(p), ▲ 문학행사는 3.1%포인트(p), ▲ 뮤지컬은 2.8%포인트(p) 증가하였으며, 미술전시회, 영화, 전통예술 관람률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야별로는 '영화 관람률(75.8%)'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중음악/연예(21.1%), 미술전시회(15.3%), 연극(14.4%), 뮤지컬(13.0%)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32.8%가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관람비용을 낮추어야 한다(28.0%)',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13.3%)', '더욱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12.5%)' 순으로 응답했다(문화관광연구원, 2018: 25).

<표> 문화공간 이용율

		평균(시간)	표본오차(시간)	신뢰구간(시간) 신뢰하한	신뢰상한	상대표준오차(%) (relative standard error)
전체		66.2	1.1	65.1	67.3	0.8
성별	남성	63.0	1.6	61.4	64.6	1.3
	여성	69.4	1.5	67.9	71.0	1.1
연령	15-19세	73.9	3.7	70.2	77.6	2.6
	20대	70.8	3.0	67.7	73.8	2.2
	30대	65.9	2.9	63.0	68.8	2.3
	40대	67.0	2.5	64.5	69.5	1.9
	50대	62.4	2.5	59.9	65.0	2.1
	60대	64.5	3.1	61.4	67.6	2.4
	70대 이상	63.0	3.4	59.6	66.5	2.8
시도	서울	69.1	2.8	66.3	72.0	2.1
	부산	53.8	4.0	49.8	57.8	3.8
	대구	64.0	4.2	59.8	68.2	3.3
	인천	63.1	4.1	59.0	67.2	3.3
	광주	86.2	3.5	82.7	89.6	2.1
	대전	82.0	3.7	78.2	85.7	2.3
	울산	77.1	4.5	72.6	81.6	3.0
	세종	61.7	8.2	53.5	69.9	6.8
	경기	60.1	2.9	57.2	63.0	2.4
	강원	73.1	4.6	68.5	77.7	3.2
	충북	72.9	4.3	68.6	77.3	3.0
	충남	76.1	4.0	72.1	80.1	2.7
	전북	86.6	3.2	83.4	89.8	1.9
	전남	85.8	3.1	82.7	88.9	1.9
	경북	65.7	3.9	61.8	69.6	3.0
	경남	45.3	4.0	41.3	49.3	4.5
	제주	62.5	6.2	56.3	68.7	5.1

자료 : 문체부. 문화향수 실태조사. 2018: 137

문화향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광주는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율은 69.9%로 서울 90%, 세종시 92.2%에 비하여 훨씬 낮은 편이나, 문화공간 이용율 측면에서는 전국 1위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1]. 광주의 문화향유 차원에서 다음 글을 인용해본다.

> 향유하고 싶은 욕망을 충족해줄만한 문화작품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편차가 극명하다...각기 공간적 특징이 있지만 지역 문화예술의 향유 여건

11) 지난 1년간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은 2018년 66.2%로 2016년 64.8%에 비해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이용횟수는 6.3회로 2016년 6.2회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문화예술활동 공간의 이용횟수는 여성이 연평균 7.4회로 남성 5.3회 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연평균 8.5회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50대가 5.2회로 가장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별 이용률은 '주민자치센터' 이용이 30.4%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민간공연장' 25.7%, '박물관'16.5%, '도서관' 및 '시·군·구민회관' 각각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문학관' 및 '문화의 집'은 이용률이 1% 미만으로 매우 낮다(문체부, 2019: 50).

이 고르게 분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광주문화재단의 공연 관람객 추이(2018년 기준)에서 재미있는 결과를 대면할 수 있다. 월요콘서트 20회 2018명,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 9회 954명, SAC on Screen 3회 1062명, 우수공연 초청기획 4회 2429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람형태가 큰 공연에 집중된 나머지 작은 공연들의 경우 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담한 공연에 아담한 관람객이 든 것이다. 관람객이 분명 목적성과 타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장르별 전시건수를 보더라도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의 경우 관람객 2019년 기준 20만명을 돌파한 만큼 시민 7~8명당 1명이 시립미술관을 찾았다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마저 작금의 현실에 적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돌출됐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시민들의 문화적 삶이라고 하는 논의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해서다. 어떤 합리적 논의도 코로나19 정국에 맞춰 해석하기는 어렵게 됐다. 어떠 논리든 다시 재작성하고 분석해야 한다. 필자는 시민의 문화적 삶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선주, 2020, 창, 발간예정).

이제는 문화기반 시설 건립 중심의 하드웨어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노후화된 문화기반 시설을 재보수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노후 문화시설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의 복합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30여개 시민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한 연대기구인 6・13방선거문화정책연대가 '민선 7기 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핵심과제'에 문화부시장제 도입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하고 광주시장 후보자에게 정책 수용을 촉구하여, 광주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화경제부시장제를 도입한 것은 의미가 있었으나, 전당 조성사업이 시작된 지 17년, 문화전당이 개관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 조성사업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문화전당의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성사업의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의 산적한 과제와 주요 현안의 해결을 위한 문화경제부시장의 보다 적극적이고도 가시적인 역할을 기대해본다.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술인들의 삶이 황폐화되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는 문화생산자인 지역예술가들의 창작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광주문화재단의 경우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위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예술 창작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권 확대 성과[12]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예술

1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7개 단체, 560백만원 지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5개 사업, 185개 단체, 1,513백만원 지원, (야외공연창작지원) 5개 단체, 168백만원 지원(광주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2020).

인들의 창작 활동 증진 및 환경조성을 위한 복지지원을 확대하였다[13].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추진 강화로 복지 지원을 확대하였다[14]. 그러나 예술인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만 간다. 광주에서 공연단체를 오랫동안 운영해오다 최근 접은 공연예술가의 글을 인용해본다.

광주지역에서 공연예술단체를 28년동안 이끌어 왔지만, 지금처럼 힘들고 미래의 전망이 어두운적은 없었다. 사실 IMF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천재와 인재까지 겹치면서 공연예술 종사자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다가 광주의 공연예술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거란 두려움에 깊은 한숨만 나온다. 나 또한 내 삶의 꿈이었던 기업형 예술단체를 201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보니, 튼튼하고 모범적인 기업형 공연단체를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지켜내지 못한 자괴감에 몇 달을 힘들어 해야만 했다. 메르스, 세월호, 신종플루, 구제역, 사스 등 일 년의 반은 개점, 휴업 상태로 보낸 지가 벌써 몇 년째이다. 모든 축제와 행사들이 취소되고 나면, 당장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 걱정과 한숨을 등짐처럼 지고 다녀야 한다. 내년은 또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까 지레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의 연속이었다(김양균, 2020, 창).

예술인들은 프로젝트 단위의 단속적(斷續的) 활동으로 인한 빈번한 실업상태에 있고, 높은 겸업비율(42.6%)을 보이는 고용형태[15] 등 예술인들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다. 또 평균 연 1,281만원에 불과한 예술활동 개인수입과 낮은 공적연금 가입률(53%) 및 고용보험 가입률(24.1%)은 예술인들이 처한 취약한 경제상황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사업 초기부터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예술인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예산 및 지원인원의 한도로 예술인들의 전반적인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 다만 올해 5월 20일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중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자에게 당연가입 방식으로 적용하기로 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문화예술 재정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16].

13) 예술인 복지지원의 수혜를 위한 전용창구 운영 및 지역예술인과 친근한 관계 회복을 위한 능동적 서비스 지원. 예술활동증명 누적수 : 1,267명, 창작준비금 선정 : 94명(282백만원 규모). 찾아가는 예술인복지서비스 : 총15회 운영. 지역문화예술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운영 : 총4회(광주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2020).
14) 1인당 연간 8만원→9만원 확대 지원
15) 문화체육관광부,「2018 예술인 실태조사」, 2018.12.
16) 노성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2. 문화거버넌스 협력 차원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17]는 자발적 참여, 구성원들 간의 협력, 해당 정책에 대한 공동의 의사결정을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 하며,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행위자 주체가 문화정책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공동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협력적 통치구조라고 일응 말할 수 있다[18]. 참여가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및 단체가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력(collaboration)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노력하는 상호작용관계를 의미한다. 공동의사결정(collective decision making)은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로 전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 편중되어 있지 않고 상호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책임도 공유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우양호, 2013).

1) 광주광역시

2019년 한 해 동안 광주광역시와 시민사회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민관 협의체'와 '시민사회협약위원회' 구성을 놓고 논의해 온 과정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 버린 것은 아쉬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닦아놓은 상호 공감대를 기반으로 문화거버넌스를 구조화시켜내는 후속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김기곤, 2020, 창).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도구적 장치가 아니라 조성사업 종료 이후에도 '문화도시 광주'를 시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실천 규범이자 사회문화적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시민들간 거버넌스를 위해 2019 광주광역시 시민배심원 회의를 운영하였는바(2019.12, 광주시 내부자료) 문화관광 이슈와 관련하여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과 상무소각장 일대 복합 문화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

17) 문태현(2005)은 '지역차원에서 지방정부, 문화시민단체, 그리고 기업 등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정책결정을 위해 형성된 협력적 네트워크'로 정의하며, 각 행위자주체는 구분되지만, 김혜경(2015)·김흥수(2004)·조광식(2007) 등은 공통적으로 문화 거버넌스를 '상호 동반자의 관계에서 공·사간의 구분 없이 신뢰와 협력을 주요 가치로 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박종일(2010)은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를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경쟁력 제고 목표를 추구해 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18) 강경화·최희성·이시원.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수준 및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의 비영리민간단체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권 2호. 2017. 55-56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최종 통과(승인)되었다. 주민배심원의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과 행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타인에 대한 배려 및 다양성 존중 등은 시정의 발전에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려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모호성을 벗어나야 한다. 과거 위원회와 무엇이 다를 것인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기대된다.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문화예술계 관련된 정책과 사업의 변화가 있으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2) 광주광역시와 문체부

광주광역시와 문체부 사이의 협력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문체부 간 정책협의회'는 중요한 통로로서, 조성사업의 현안에 대한 상호 소통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협의회는 2019년 2회, 2020년 1회 개최되었다. 5대 문화권 사업 및 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옛 전남도청 복원, 민간투자 유치, 제도 개선 등 조성사업에 관한 굵직한 사안을 책임 있는 주체들이 협의하며 조정해 나가고 있다. 광주시는 정책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분야의 제안 사업 등에 국비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전당 운영 주체 재설정,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 설립, 연차별 실시계획 사업 승인, 아특법 개정, 옛 전남도청 복원 등 조성사업 관련 핵심 사안을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추동력을 확보하였다. 즉 시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전당 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하여왔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최대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20년 1,130억원), 현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체제 유지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20.3.31), 시 - 시민사회단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와 전당간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운영하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 기간이 2026년, 조성사업의 목표기간이 2023년까지임을 생각하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17년 동안 예산 투입량이 계획대비 32% 정도에 그치는 점은 더욱 안타깝다. 최소한 21대 국회에서 아특법의 시효 및 목표기간을 5년 연장해서 조성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광주시는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아특법 시행령 부칙 개정으로 성과평가후 국가소유로 할지 전부위탁 여부 결정을 내년으로 미루

어놓았지만, 새로운 운영주체 결정이 늦어져서는 안된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의 공간활용율이나 수익구조를 따지기에는 아직 이르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 비해 수익률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 당초 문화산업적 맥락에서 조성된 것이 아니긴 하나, 전당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문화산업콘텐츠로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융합형 킬러콘텐츠 창제작에 자원을 집중해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 이름에 걸맞는 대표 브랜드 콘텐츠를 창조해내야 한다. 꾸물거리거나 잠을 잘 시간이 없다. 숱한 시행착오와 경쟁과 긴장압박을 견디며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전당에서 나오기만을 고대한다. 아특법 시효 연장 문제, 운영주체의 문제, 전당장 문제, 전당 내부 시스템 문제, 계획 대비 미흡한 예산 문제, 수익구조의 문제보다도 이것이 더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CT 연구원 설립[19]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의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2018년 5월 CT연구원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 이 있었고, 2019년 2월 문체부의 (가칭)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과 동년 7월 4일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있었고, 2020년 5월 문체부의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발주가 있었다. 지금까지 CT연구원 관련 숱한 용역발주와 두차례의 입법발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결과는 아무 것도 없는 현실이다. 이 지역 출신 21대 국회의원들은 직을 걸고 CT연구원 설립을 매듭지어야만 한다. 용역발주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 구두선은 필요 없고, 입법과 정책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는데, 이를 실현해내지 못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당은 외로운 섬이다. 지역사회와 융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역민의 지지기반이 없이는 말이 안된다. 광주시민들도 전당의 존재감을 못 느낀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나 이런 프로그램을 즐기는 문화시민들은 과연 얼

19) 처음으로 2007년 10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종합계획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운영 계획을 반영하고, 과기부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2008.2)과 문체부의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 CT연구원 반영(2011.3)을 토대로, 2011년 12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CT연구 주관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 내에 두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2013년 1월 문체부의 CT연구원 조직규모 산출 연구용역 이후, 2013년 4월 1일 GIST내 「한국문화기술연구소」를 개소하였으며, 2013년 5월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제114번)에 반영되었으나, 2013년 7월 CT연구원 설립 예타대상사업에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다. 2013년 10월 CT연구원 설립근거 마련 국회의원(장병완) 입법발의가 있었으나,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16.5). 2017년 11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신설을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송기석의원 의안발의가 있었으나 대표발의자 의원직 상실('18)과 20대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20.5).

마나 될까? 시민반응, 시민들의 만족도에도 민감하게 작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전당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관람하러 오는가 ? 광주는 과연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인가 ? 우리끼리라도 즐거워하여 들여다 봐야 한다. 문화예술 관련된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은 전당의 존재감을 체감하고 있을까 ? 전당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전당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외지인들이야 일러 무엇하리요. 전당 안에서 행사를 한다 해도 밖에서는 잘 모른다. 미디어 월 정도의 것을 밖에 설치했더라면 행사효과가 더 극대화될텐데 아쉬움이 있다.

3)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은 그동안 경영혁신 및 조직고도화로 경영·사업 성과 지속적으로 향상해왔다[20]. 그리고 광주 문화시정 중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왔으며[21],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매우만족' 평가로 재선정에 기여하였다[22]. 그리고 빛고을시민문화관, 우수공연 및 문화서비스 확대로 전문공연장 기능을 강화하고[23], 전통문화관, 전통문화예술 콘텐츠 확대와 무등산권 문화자산화를 추진하였다[24].

광주문화재단은 문화기관과의 협력 증진 및 청년일자리 사업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정책 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기관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광주문화기관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공동사업 및 협력사업을 확대하였으며[25], 한

---

20)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3년 연속 A(우수)등급 획득, 경영평가와 연계한 개인별·부서별 성과관리매뉴얼 구축 및 평가제도 고도화, 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 및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2개 분야 및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 문화이모작 지역교육 기관사업 최우수 프로그램 부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21) 예술인복지지원 전용 창구 운영으로 1,212명 전문 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 공모사업 수주 등 적극 노력으로 청년문화일자리 845개 창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7개 연계 사업으로 적극 협력(101회 운영,6만명 관람),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등 광주만의 특별한 문화예술콘텐츠 제작·보급 등.

22) 유네스코 창의도시 부의장도시로서 활발한 국제적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유네스코창의도시정책포럼 개최(12개국, 23팀, 42명 작가 참여), 미디어아트 콘텐츠 '덕령이-취화월야' 등 4종 개발 및 미디어아트플랫폼 운영 안착.

23) 월요콘서트(20회), 수요렉처콘서트(9회) 등 상설 기획 공연 안착으로 매 공연 만석 달성, 지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부족했던 다목적 전시 공간 조성, 예술가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對시민 소통 공간 5개 조성

24) 주말 상설공연 활성화(70회 운영), 전통문화예술체험 및 강좌 등 운영으로 무형 문화재 전수 공간 안착(77회 운영), 누정총서 총4권 속간으로 총10권 완간, 누정기행 등을 통한 문화관광자원 발굴, 무등산권 '근대인물 선각자의 삶' 조명을 위한 전시, 토크콘서트 등 추진

25) 대표 공동사업으로『문화기관.단체 디렉토리북』발간과 공동포럼, 직원교육 등 14건의 협력사업과 8건의 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

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26] 회장기관으로서 부설기관 '문화정책연구소' 개소로 문화정책 전국 네트워크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홍보 다각화 및 시정 사업 적극 협력을 통한 시민 소통을 활성화하였다[27].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관련 기관들에서는 문화정책과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집행과정과 평가단계 등 전반적 정책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3. 광주시민의 문화활동 참여와 문화 창조의 차원

2017년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추진계획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로도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가 선정되었고,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또한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중장기 문화정책 비전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에서도 '지역 문화분권 실현'이라는 정책 의제와 관련, 지역문화 정책이 핵심 사안으로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지역민들이 문화예술 참여와 향유의 주체로서 문화적 삶을 실현하고, 주민과 지역정부가 지역발전과 삶을 향상할 수 있도록 협치를 통한 지역 문화역량 강화가 강조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문화를 위한 기관으로 2016년 (재)지역문화진흥원을 설립하였고, 그간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생활문화동호회 협력 및 교류,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역문화 인력지원 사업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시민이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동아리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지원) 55개 활동단체, 103개 동아리, 464백만원 지원한다고 광주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2020)에 나와있다.

마을합창단, 마을풍물단, 마을축제, 마을오케스트라 등 마을문화를 활성화해 마을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마을이야말로 쓰레기, 주차, 방과후 돌봄, 환경가꾸기,

---

26) 2016년 5월 22일 제주에서 출범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를 들 수 있다. 한광연은 전국 14개 광역시도문화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지역고유문화의 발전과 격차해소를 통한 문화국가 실현 ②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문화자치의 건전한 육성 ③ 지역문화재단의 연대강화와 협치를 통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진흥의 정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한라일보, 2016.5.22).

27) 유튜브 채널 개설 등 SNS 매체 다각화로 홈페이지 접속자수 월 평균 76,000여명(전년도 52,000여명) 146% 이상 증가 및 SNS매체(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팔로워 9,335명을 확보하였다. GCF 크리에이터(유튜브) 6명 및 엄마랑아이랑 기자단 (네이버 블로그) 5명 운영 등 시민 참여형 홍보 전략으로 시민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였다(광주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2020).

문화유산 돌봄, 공동체문화 등 일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위이다. 생활문화의 활성화는 마을문화를 토대로 할 때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문화비전 2030, 2018: 242).

<표> 생활문화센터 개설 현황 (2018.4 기준)

지역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합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조성	3	8	16	11	15	10	3	9	10	3	2	3	9	8	16	10	6	142
개관	3	8	12	7	13	7	2	6	8	3	1	3	6	4	14	9	3	109
소계	30				36					13				30				109

자료: 지역문화진흥원 (http://www.rcda.or.kr)

생활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은 생활문화 개념이 등장한 1990년대 후반부터 생활밀착형 공공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경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전국에 걸쳐 문화의집이 조성되었고, 지방문화원에도 문화학교 등 시민문화교육이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이 거주하는 생활권 내에서 동호회를 결성하여 직접 창작 및 참여 활동뿐만 아니라 동호회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문화 공간을 위해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의 유휴시설 또는 기존 시설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민들의 생활문화를 위한 공간을 조성해주는 생활밀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다만 단순히 시설 증가가 지역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공간·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및 운영 인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 균형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된 사업은 주로 공간·시설 개선 측면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왔다. 더구나 타부서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 증가, 기존 생활문화시설과의 차별성 부재, 기존 문화시설 간의 연계 체계 부족, 중앙과 지자체 간의 전달 체계 미흡 등의 문제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유지인, 2018: 108).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지만 문화행사나 동호회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아직 10% 미만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진흥정책'을 재정비해 추진한다.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모호한 개념으로 인한 정책

혼선을 제거하고, 유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조정해 차별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Ⅳ 맺음말

민선 7기 2주년에 즈음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은 광주시민들의 문화향유와 문화활동 참여기반 조성을 위하여 실로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더 나은 미래의 광주를 위하여 잘 달리는 말에 몇가지 가편을 하고자 한다.

모든 광주시민, 나아가 전국민을 예술가화해야 한다. 프로 예술가가 아니라 전국민의 (아마츄어) 시민예술가화를 주장하고 싶다. 생활 속에서 문화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 문화생산과 소비가 적극적으로 선순환되어야 한다. 이것이 문화기본법에서 문화의 향유 이외에 문화활동 참여와 문화창조가 국민의 문화기본권에 포함된다는 취지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 활성화를 강조하는 취지이다. 다시 말해 문화민주주의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의 민주화 정책비중보다 문화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일반시민들의 문화창조와 문화활동 참여 정책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현행 예산 자원의 배분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생활문화를 포함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문화창조활동을 할 수있도록 지원하는데 예산자원이 보다 더 투입되어야 한다. 전문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수월성 추구를 위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문화행정 내지 문화정책은 결과적으로 선별적인 우량 '표현'과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과(표현물)를 만들어내고, 보다 나은 생활방식을 구하는 인간의 행동도 대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표현자인 인간이 사는 공공적인 '생활'의 장과, 인간의 '교류'의 장, 학습.연구의 장도 문화행정의 대상영역이 된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표현자도 뛰어난 프로페셔널 예술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수한 '생활'의 장과 '교류'의 장, '학습'의 장이 있는 것이야말로 우수한 '표현'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며, 달성된 '성과'라는 선별적인 조건을 전제로 해서는 무명의 프로페셔널과 다수의 아마츄어는 배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치단체 문화정책은 프로.아마츄어를 불문하고 시민에게 그 존재근거를 가지는 것이며, "시민 한사람이 문화적 존재이다."라는 인식과 이념을 빼고서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이념에 입각한 시민문화의 활력이야말로, 지역과 도시 정체성(identity)의 기초인 것이다(서순복, 2015: 16-17).

광주의 매력물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아시아 예술의 메카로 변신하는데 성공하여야 한다. 킬러 콘텐츠와 문화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자에게 집중하고, 숙련 지식노동자(창조계급)를 끌어들여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선전을 통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장소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도시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도시의 수요자 중에서 관광객과 기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글래스고우와 같이 과거 석탄산업 공해도시로 낙인찍힌 도시이지만 문화수도를 계기로 한참 도시가 역동적으로 그것도 포스트모던하게 탈바꿈한 것처럼, 우리 광주는 5·18까지도 문화적으로 승화시켜 문화로 도시의 역동성과 창조성이 펄펄 끓는 창조도시의 성공은 요원한 것인가?

또한 문화정책과정에 전시민적 참여가 중요하다[28]. 참여적 기획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문화적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문화재단 포함) 문화정책과정 전반에서 문화생산자와 일반 광주시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모든 수준의 지역공동체가 지역협의과정에 관여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서 일방적.하향식 접근방법이 지배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하향식 전문가 중심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대신에, 평균적인 일반 시민들과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을 포함한 지역공동체에 토대를 제공하여 그들의 견해와 기대를 표출하도록 하고 의사결정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책을 펴가고, 지역의 정체성과 정주의식을 확립하며, 소외감을 극복하고, 도시재생과 도시브랜딩의 접근방법을 둘러싼 오해와 주인의식 결여를 피하고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문화적 투자는 세계적 수준의 제품(문화상품)을 수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문화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또한 문화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의 창조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촉진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적극적 활동이 촉진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문화 투자는 사람과 지역공동체를 함께 아우르며,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사람(지역인재)을 그 뒷전에 두는 위험을 야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 공간적 딜레마 문제에서, 광주시내 중심부와 주변부지역의 요구에 모두 응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대형 이벤트의 예술 프로그램은 도시 중심부에 집중되고, 대부분 특권단체를 위해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공간적으로 예술 프로그램을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성공적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광주의 문화활동을 도시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까지 포함시켜서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배분시켜 행하는 탁월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

28) 이 부분은 영국 글래스고우 문화수도 성공사례에 관한 필자의 논문을 부분 인용하였다.

무엇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체계는 지금 조직출범 이후 몇 년이 경과하였는데, 아직도 대행체제란 말인가? 직무대리 체제 하에서는 과단성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할 수 없다. 조직체계는 조직성과 달성을 위한 도구일진대, 조직 이원화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은 조속히 단절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직을 걸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공약까지 된 마당에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를 임기내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 직위에서 내려올 각오를 해야 할 것이고, 지역사회는 국민소환 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정 토론문

광주광역시 민선7기 문화정책의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관점의 평가

이 순 학 (상상실현네트워크 공동대표)

0. 들어가며 : 민선7기 문화정책 진단 및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며

광주광역시 민선 7기 2주년을 맞이하여, 지역문화정책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청년문화단체들이 연대하고 상생하고 있는 상상실현네트워크와 함께 이 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문화단체들과 광주광역시, 광주문화기관들의 협력에도 인사를 전합니다. 상상실현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현장에서 광주 문화발전을 위해 힘쓰며, 지역에서 민간기반의 문화생태계가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문화경제부시장'의 제도의 한계

민선 7기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에서 광주문화예술계들이 가장 주목했던 제도는 '문화경제부시장'의 신설이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래먹거리로서의 '문화', 즉 기초예술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진 광주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 '산업'광주로 도약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문화경제부시장'제도.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을 기대했던 '문화경제부시장'이라는 구조는 민선 7기 2주년을 맞이한 지금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문화정책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들 수 있다. 문화경제부시장 제도에서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가장 큰 부분은 각 문화기관들의 행정'칸막이'를 걷어내고, 문화정책의 '허리'를 연결해 나가는 '결정권'을 소유한 컨트롤 타워였다. 민

선7기에서 과연 행정 칸막이가 없는 문화사업들을 몇 개나 찾아볼 수 있을까.

- 기회의 사다리가 없는 지역문화생태계에서 광주광역시의 역할

진흥영역에서 문화정책과 예산을 수행하는 광주문화재단과 산업영역에서 문화정책과 예산을 수행하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두 기관을 중심으로 볼 때, 광주에서 '문화경제'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한 '과오'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 수행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광주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문화 예산을 독점하고 있는'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광역시의 지역문화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하는 가장 큰'악순환'을 만들어 낸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특히 지역소통 부분에서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불통'의 문화기관으로, 타 지역 정보문화산업진흥원들의 비교하였을 때 가장 많은 사업영역을 독점하고 있는 곳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기반 국비사업의 경우, 광주광역시처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모든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많지 않다. 타 지역의 경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문화관련 중간지원들에 사업영역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예술가를 전문위원으로 선임하여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 필요한 문화산업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에서 육성한 지역문화예술인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사업구조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에는 엄연히 지역문화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거대 예산을 집행하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오히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에 기대어 생태계 성장을 기대하는 모습 또한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인 반성의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 문화조직 중 '문화경제'와 '문화산업'의 답을 내놓아야 할 대표적인 기관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지역문화생태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사업과 제도가 있는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정가를 떠올릴 수 있는지 질문해봐야 한다. 광주문화재단의 진흥영역에서 성장한 지역문화 인프라를 광주정보문화진흥원의 문화산업 제도 속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허리'를 연결하는 컨트롤 타워가 문화경제부시장의 역할이다.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조성' 관점에서의 문화정책

광주광역시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코로나 19 대응정책으로 특수고용직(예술인) 등의 생계비(최대 100만원) 지원책을 마련해서 실시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문화예술관련 공연과 행사들이 취소되고, 문화예술 교육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예술가들도 등교 시기가 늦춰지면서 여전히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1분기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예술가와 문화단체들이 대다수이며, 2분기가 마무리 되는 이 시점에도 새로운 활로는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광주의 예술가들이 느끼는 것은 지역에서 예술가라는 직업을 영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이다. 광주에서 전업 예술가의 삶과 전업 예술단체, 전업 예술기업의 가능성이 있을까?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월급 1,795,310원. 매월 한 명의 예술가가 200만원 가까운 소득을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을까? 지역의 문화단체가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 매월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을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문화생태계'를 넓혀 가야 한다. 특히, '재원조성' 관점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부터 금융지원 단계까지, 전문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문화영역에서 광주광역시가 기초예술인부터 전문단체까지 예술인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증 제도와 금융기관 연계 서비스를 개발하고, 특히 담보나 보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 가능한 사회적가치기반의 기금조성사업 또한 필요하다.

3. 광주문화정책 14대 중점과제의 실현과정에서 '문화분권'과 전문TF 필요성

- "중앙부처에서는 국비 매칭을 통한 문화기반조성의 의지가 있는데, 광주광역시 '행정'이 관심이 없다."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선 6기 시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정부와 중앙부처에서 이야기되었던 논의 중, "중앙부처에서는 국비 매칭을 통한 기반조성의 의지가 있으나, 이를 보조하고 속도를 맞춰갈 수 있는 광주문화

행정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물론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어 광주광역시에 문화관광체육실 내 문화도시정책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협력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행정의 적극성과 속도는 늘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되었다.

지역문화생태계에서 활로를 찾지 못한 지역의 많은 문화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집행하는 중앙부처 문화사업들을 또 다른 활로로 해석하고, 축제와 중간지원제도 등 중앙부처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 중 지방정부의 매칭이 필요한 사업들도 많다. 중앙부처의 공모나 심사과정에서 광주의 문화예술의 수준이 높게 평가되어 국비로만 집행되는 사업들은 대다수 실현되지만,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중장기 단계로 사업의 연차가 높아지면서 지방정부의 관심을 얻지 못해 사장되는 문화사업들과 문화콘텐츠들도 많다.

-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14대 중점과제 실현을 위한 문화분권과 전문TF 역할이 가능한가

광주가 예향의 도시라 불리는 이유는 예술인들의 자생적인 문화 활동에 더해 '시민력'이 높기 때문이다. 유료 티켓의 운영구조를 갖기 어려운 지역 환경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자생적인 구조를 확립한 것도 시민기반의 후원과 회원제 등을 도입한 '함께 운영' 구조 덕분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간의 규모에 상관없이 자생적인 문화 활동가와 문화적 가치가 지역정체성으로 형성되고, 지역은 문화다양성이 생동하는 곳이 되었다. 그러한 문화적 토양을 갖고 있는 지역 환경과 지역문화가 공존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은 '원칙적인 철학'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독점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를 '분권'할 수 있는 민관협치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14대 중점과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전문TF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운영구조와 방향을 합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위원회가 단순히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에 대해 자문에 그치는 역할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화행정 독과점 구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민관협치로 만들 수 있는지가 민선 7기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4. 나가며 : 광주에서 예술은 가능한가, 광주에서 '문화경제'는 가능한가

최근 6월에 실시한 전국의 지방공무원 시험에 19만이 넘는 대한민국 청년층이 응시했다. 전국에서 예술가로, 혹은 문화예술 분야 창업을 꿈꾸며 직업을 찾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 공무원만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에 과연 미래를 설계하는 역동성이 존재할지 미지수다. 어떤 영역에서 자립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어 가장 필수 조건은 그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다. 코로나 19로 인해 다시 '공무원'이 꿈인 사회.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가 명제가 된 시대가 되었다.

'광주에서 예술은 가능한가, 광주에서 문화경제는 가능한가'를 다시 질문하고, 단 하나의 답이라도 찾아내야 한다. 민선 7기 2년의 시간 동안 지역문화 생태계에 얼마나 새로운 일자리가 실제로 생겨났고, 어느 정도의 문화적 재원조성 방향이 신설되었는지 '성과'로 표현할 만한 답안지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는 2년의 시간 중 2019년에는 10대 중점과제를 '목격'했고 2020년에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14대 중점과제를 '목격'했을 뿐이다.

민선 7기 3년차, 2021년 현장에 필요한 증명과정을 기대하며, 청년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장르와 전공을 떠나지 않고, 지역문화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적극적으로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광주 지역문화정책의 성과 평과에 관한 시론적 접근」 토론문

김 지 원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Ⅰ.

짧은 시간과 자료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상반기 광주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평가를 상세하게 해주신 서순복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제문 서두에서 언급한 "자치단체 문화정책은 프로, 아마추어를 불문하고 시민에게 그 존재근거를 가지는 것이며 '시민 한사람이 문화적 존재이다' 라는 인식과 이념을 빼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언급은 다시 한 번 문화정책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환기해주었습니다.

발제자는 지역문화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1995년을 중요한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문화가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시점입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의미의 지역문화정책이 수립되고, 그 정책의 연장선에서 참여정부의 '창의 한국', 그리고 현 정부의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로 이어지는 지역문화정책의 긴 여정을 반추할 수 있었습니다.

본 토론자는 발제자가 민선 7기 광주 지역문화정책 평가를 1. 시민들의 문화향유 차원, 2. 문화거버넌스 협력 차원, 3. 시민의 문화활동 참여와 문화창조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틀을 따라 논의에 대한 공감과 이해, 논점의 확장과 이견, 대안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이어가겠습니다.

Ⅱ.

발제자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정책적 성과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그 확산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왔다." 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문화경제부시장 직제 신설, '광주문학관 건립' 부지 확정 및 건립 추진,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착공, 전일빌딩 리모델링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간주합니다.

문화향유와 관련한 평가에서는 광주문화재단이 위탁하고 있는 빛고을시민문화관의 프로그램 사례를 "작은 공연들의 경우 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인

용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대관위주의 공연장 운영에서 '적극적인 기획공연 형태로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 라는 평가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발제자는 정책적 제언으로 "문화기반 시설 건립 중심의 하드웨어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노후화된 문화기반 시설을 재보수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고 하면서 "노후 문화시설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의 복합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 합니다.

필수불가결한 문화기반 시설은 건립을 해야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공감되는 정책 제언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문체부의 지방이양사업 목록을 보면 신규 건립되는 지역문화시설에 국비확충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문체부 지방이양사업 목록>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명	19예산	지방이양
< 총 계 >		540,984	403,599
균특자율계정 (시도)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244,949	107,564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15,991)	(15,991)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	(5,040)	(5,040)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10,268)	(10,268)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7,177)	(17,177)
	(문예회관 건립 지원)	(20,613)	(20,613)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	(14,504)	(14,504)
균특자율계정 (시도)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3,136)	(3,136)
	(전통문화진흥지원)	(3,980)	(3,980)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12,735)	(12,735)
	(복합문화시설조성)	(2,800)	(2,800)
	(전통사찰 보수정비)	(520)	(520)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800)	(800)
	□ 관광자원개발	260,272	260,272
	□ 지방문화사업 기반지원	9,538	9,538
	□ 지역문화행사지원	16,830	16,830
문예 기금	□ 예술의 관광자원	21,233	9,395
	(지역대표공연예술제)	(9,395)	(9,395)

Ⅲ.

문화거버넌스 협력 차원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광주광역시와 시민사회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민관 협의체'와 '시민사회협약위원회' 구성을 논의해왔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갈등 현안을 개혈하는 도구적 장치가 아니라 조성사업 종료 이후에도 문화도시 광주를 시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실천 규범이자 사회문화적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라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시민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되는 과정에서부터 제시된 중요한 문화거버넌스 체계입니다. 발제문에는 시민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만,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제자에게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그 혜안을 듣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 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관련 기관들에 주문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기획에서 집행, 평가단계에 어떻게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사업의 환류체계를 확립하는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각 기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전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발제자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거버넌스 협력체계의 위상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해주시기를 두 번째 질의로 요청 드립니다.**

Ⅳ.

<정부의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확장>

구분	기존 문화정책	포용국가의 문화정책
대상	· 소외 계층 (특히, 경제적 소외계층)	· 모든 국민 (특히, 문화적 소외계층*)
성격	· 복지적 성격 · 생존권 보장	· 자발성 지향 · 자유권·평등권·생존권 보장
관점	· 공급자(생산자) 관점	· 수요자(향유자) 관점
기본방향	·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확대	· 전체 생애주기 관점에서 문화역량 및 경력 지원
주요사업	· 문화바우처 사업	· 자발적·자율적 활동 지원사업 -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공동체 - 문화놀이터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 사회 문화예술교육	· 생활문화기반시설(SOC) 활성화 - 문화적 공유개방공간 조성 - 공유성, 복합성, 개방성 지향 · 문화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원사업 - 문화도시, 문화적 도시재생 - 유휴시설 문화재생

문화활동의 참여와 문화 창조와 관련해서는 생활문화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지만 문화행사나 동호회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모호한 개념으로 인한 정책 혼선을 제거해야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생활문화 개념은 1990년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서 생활문화 진흥을 다루면서부터 등장 합니다. 이때의 생활문화 개념은 문화의 향유와 참여적 문화활동을 강조하는 수준으로서 문화복지 개념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활문화의 개념이 장르·영역 중심에서 주체·대상의 관점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에서는 주체(지역주민), 대상(전문예술인이 아닌 일반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활동유형(자발적, 일상적)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지역과 지역 주민에 의한 일상적 문화 활동의 개념까지 확장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활문화의 확장은 개인의 취미와 취향을 넘어 문화향유의 새로운 소비주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지원이 시작되었다면,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40년 이상 터울로 제정된 법률은 아마추어 생활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법적 체계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예술향유 형태가 소극적 관람에서 직접적 참여의 형태로 변해서 이제 시민이 단순한 향유자가 아닌 창조자로서, 문화예술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등장했다는 좀 더 포괄적인 문화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Ⅴ.

발제문에는 없습니다만 지정 토론자로서 논의의 확장을 위해 두 가지 정도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2년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최근에는 예술인고용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관련 업무가 확대되면서 각 광역재단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2017. 2.)를 시작으로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2018. 4.), 작년에는 경남예술인복지센터(2019. 8.)가 개소했습니다. 문화예술의 선순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어 창작지원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광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들이 시도되었으면 합니다. 고령화, 양극화, 세대갈등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계층간, 세대 간, 이주민 간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이 되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분야의 문화정책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 공론장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패널

토 론 문

민선7기 문화정책 비전과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

이 현 미 (광주민예총 사무처장)

지난 6월8일 출범한 광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출범 당시 밝힌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문화예술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세기의 경제키워드가 문화예술이며 문화콘텐츠가 산업의 되어 미래의 먹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품격이란 문화예술에서 나온다. 광주의 문화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창조적 약량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하고, 융복합의 시대이므로 경계를 넘어 소통과 연대를 활성화해야 한다."

김준영 문화관광체육실장은 '품격 있는 문화일류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민선7기 문화정책 비젼 및 방향'으로 그 실현의 방도를 브리핑하였습니다.

1. 광주 대표 공연, 음식, 마을 육성 2. MICE 중심의 국제관광도시 조성(광주관광재단 설립, DJ센터 복합지구 조성 및 2센터 신축) 3.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조성(광주시설관리공단설립. 생활SOC확충,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 실감콘텐츠큐브 건립) 4. 생활문화구현,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 예술 확산

종합해 볼 때 산업화가 가능한 문화예술의 기반 시설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생활문화예술 분야에 치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자원이 풍부해야 합니다.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하고 전문 문화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활발하여야만 합니다. 우물에 고인 물이 없는 데 퍼 올려 생수로, 이온수로, 음료수로 만든다고 하는 계획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요? 기초예술 활성화, 전문예술가들의 활발한 창작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의 기반시설과도 같습니다.

장기적이며 분야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골자로 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창조적 약량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에 힘쓰는 일입니다. 일반

적인 수준의 복지가 아닌 예술가가 공공성에 기반한 예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체육 육성은 있지만 경쟁력 있는 전문예술가 육성은 없습니다.

융복합의 시대이므로 경계를 넘어 소통과 연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소통과 연대가 문화부문, 예술부문, 정책부문 모두가 소통이 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소통과 연대가 활발하여야 합니다만 이 소통의 창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소통되고 있습니까?

이 소통의 창구로 발족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출범의 방식부터 일방소통이었습니다. 구성의 원칙, 구성방식, 운영방식까지 행정 주도였고 사전 소통은 참석여부를 묻는 과정 한 차례가 전부입니다. 누가 오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는 당일 현장에서 알 수 있었고, 위원들의 면면도 확인 불가한 상태로(직함이 없는 이름만 소개됨) 민간 위원장을 뽑고 그 자체로 출법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기구가 간단한 자문의 역할로 끝나면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그 기구를 통해 광주의 문화예술의 향방을 주도해 가려한다면 문제는 크게 노정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작년 경제부시장이 주도한(명칭이 생각 안남) 그 포럼과 일맥상통한 조직이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직으로 시장, 문화경제부시장, 문화관광체육실장, 위촉직으로 문화예술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기획자 60명이 분기별 1회 모여 문화예술인 역량결집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원활한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해결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해 활동합니다.

정책과 예산편성에 대한 자문, 민·관 가교 역할 수행, 문화정책 정보 공유, 교류 및 사회적 이슈 갈등 등의 해결방안도 자문합니다. 분기별 1회이나 필요시 수시로 모일 수 있다는 전제는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실례로 작년에 출범했던 포럼은 출범 후 몇 번의 모임을 하고 몇 가지의 자문과 정책 공유를 했을까를 되짚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출범 시 공유했던 비전과 정책이 전부였지 않았나요? 별 성과도 없이 항간에서 이 포럼이 당시 경제부시장의 선거용 이력을 만드는 증빙이었다는 설만 여기저기서 난무한 채 조직 자체를 무기력하게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지나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대목입니다.

진정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을 원한다면 사회적 갈등의 당사자들의 시민 주체단위와의 협의를 활성화 하고 민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실질적 협의체가 더 절실한 건 아닌지요.

뜻은 창대하나 그 끝은 미약한 정책이 아닌,
올바른 목표를 제시하나 구현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실종되는 정책이 아닌,
소통과 협력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상생의 정책구현이길 바랍니다.

%
참조사항
모든 조직구성 일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구성의 목적이다
신설한 위원회의 목적 세 가지를 보라
과연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위원회인가 따져볼 일이다

‘품격있는 문화도시 광주’란 어떠한 품격을 쫓고 있는가

박 상 현 (상상실현네트워크 사무처장)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의 내용을 듣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틀린 말도 없고 광주문화예술의 현시점을 명료하게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예술분야 뿐만이 아닌 전 분야에서 심각한 타격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이 또한 잘 이겨내고 극복하며, 새로운 사회문화를 발견 정착시켜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의 현재 문화예술계의 빈약한 체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열해 주신 지원과 그 성과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광주가 타 지역과 비교해서 심각하게 뒤떨어지는 정책, 지원으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난받기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품격있는 문화도시 광주’ 라면 좀 더 문화예술인들이 광주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광주만의 독창적이거나 특별한 무언가가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은 여전합니다.

현재 광주는 지원을 통해 창작자들의 열정이 마르지 않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그들의 창작품을 거의 무료로 소비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분명 문화소비 확대를 위해 필요하지만 또한 문화예술은 지불을 하지 않거나 지불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이유는 광주에 시장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미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장르와는 별개로 미술작품은 관람의 방식과 보유의 방식으로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광주에는 미술품 거래를 통한 소유방식에 대한 시장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유하기 위한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술품 구입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가 현재 광주에는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질문1.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광주시만의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신다면 현실적 정책의 시작점은 무엇인가요?

또 한 가지는 광주시와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가들에게 창작을 지원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획자들에게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청년문화기획자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기획자들이 사업이나 활동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처우는 예술가들 못지않게 빈약한 현실입니다. 때문에 기획자를 꿈꾸다가 결국 먹고사는 현실 때문에 관공서 취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획자는 지역의 현안과 창작자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하는 창작자 이기도하며 관공서의 욕구와 창작자의 욕구도 연결, 해소, 조율해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기획자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기획자에게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만한 권한과 댓가를 지불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물론 그만한 역량을 발휘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며 바탕을 두는 것은 그만한 역량을 발휘하는 기획자는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2. 대부분 문화 사업은 관에서 주도하고 보조 사업이나 지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기획자는 앞서 말한 2가지를 모두 해야 만하는 현실인데 이를 좀더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나 고민을 재단과 시는 해보신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언어와 창작자의 언어가 다르며 기획자의 언어 또한 다릅니다. 매년 담당공무원의 보직은 변경되며 이는 기획자 또한 매년 달라지는 공무원을 설득하는 과정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담당공무원의 성향에 따라 사업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품격있는 문화도시 광주는 보여지고 단순 공짜소비만이 아닌 창작, 소비, 유통이 다른 곳과는 다른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선 7기 전반기 문화정책 단상

김 종 필(광주문도협 협동사무처장)

질문 1.

발제문에 보면 민선7기 문화정책의 특징은 문화행정의 창의성, 전문성, 일관성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문화경제부시장 직제**'를 신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광주 문화발전의 조직역량을 강화와 함께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표현하셨고, 민선 7기 2년의 주요 성과로 문화경제부시장 지제를 신설한 것을 꼽고 있으나, 광주광역시의 문화경제부시장님은 광주시의 여러 시민문화, 사회단체들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총선 시기에 퇴임을 맞으면서 임기 2년 동안 문화경제부시장의 행보는 존재감을 상실했다"며 "광주형 일자리 등 경제 현안에 치중한다는 미명 아래 문화와 관련해서는 총선 경력용으로 적절한 명분이 필요한 역할만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신임 부시장님에게 "문화경제부시장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전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문화경제부시장은 무늬만 문화가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담보하고 직위에 걸맞은 능력과 자질도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임 부시장님의 행보를 보면

부시장 2019년 10월 30일 취임 1. 양동시장 방역점검(2020년 2월) 2.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에서 열린 공예특화거리 개장 기념식에 참석하여 참석 내빈들과 함께 물고기 풍경달기를 한 후 기념촬영(2020년 6월) 3. 광주광역시는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제4차 정책협의회'를 개최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박태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 김도형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김준영 문화관광체육실장 등 15명이 참석해 아특법 개정사항 및 2021년 국비 신규·증액사업 등에 대해 논의) 2020년 6월 4. 202년 5월 4일 오후 3시에 광주시청3층 문화경제부시장실에서 권은희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주요현안업무 및 사업 건의, 국비지원 건의와 20대 국회 미

처리 법률안 현황 및 입법지원 건의 등 애로사항 및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 언론 보도 중심.

신임 부시장님의 취임이 9개월째 되어가는데 그동안의 업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민선7기 2년의 주요 성과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문화예술·관광분야 행사자제 등 방역대책 마련 추진 : '20.2.3.~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예술시설 단계적 개관 추진 : 48개소(공공 39, 민간9) · 문화예술행사 연기·중단 : 223건(국악상설공연, 미스트롯. 전시회 등) · 문화·관광·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 홍보 및 지속적인 점검('20.3.8.~/5,766개소)으로 시민의 안전 및 광주공동체 보호에 최선 * 특수고용직(예술인) 등 생계비 지원책 마련(최대 100만원) * 코로나19 극복 예술프로젝트(비대면) 시행 ·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안방예술극장 오픈 : '20.3.26.~ · 온라인으로 보는 광주국악상설공연 개시 : '20.4.3.~ · '코로나19 극복 응원송' 3종 제작 등

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급 외에는 주로 방역에만 치중되어 있고,
비대면 프로젝트 시행, 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안방예술극장 오픈, 광주국악상설공연, 코로나 극복 응원송 제작 등은

1.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체들은 준공무원이며, 코로나 사태로 1개월 정도의 유급휴가를 즐긴 것으로 안다. 국가적으로도 공무원과 교직원, 군관계자 등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2. 국악상설공연이나 응원송 제작 등은 극히 일부 예술인들에게만 해당되며 이 또한 이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공연 참가비를 받았을 터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광역시'의 기초예술분야의 풀뿌리 예술인들은 아사중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

질문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위상과 광주다움을 회복하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이슈 등의 해결방안 모색의 구심체 역할을 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8일 발족식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번에 발족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민선7기 후반기 문화정책의 민·관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으며, 광주 미래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예술인들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교류의 창구 역할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광주문화공동체 형성 역할,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광주의 문화예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등을 발굴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는 이름의 단체? 기관? 은 그 역사를 살펴보자면

2004년 광주시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을 민간조직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그동안 시장의 자문심의기구 기능 밖에 하지 못했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해 집행 역할까지 맡도록 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최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사업 등을 추진키 위해 광주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의결하여 추진. 2004년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출범 2007년 2기 출범 2011년 1월 문화재단 출범 2010년 문화예술 관련 조직들이 각각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 집행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하여 '문화예술인 지원과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공연예술재단, 시립예술단 등 문화예술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광주문화재단 설립' 추진. 문화예술인 지원과 시민에 대한 문화향수권 확대, 문화기금 확충 등 '시민이 행복한 문화공동체 광주'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출발.

현 광주문화재단 설립목적 : 시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2011년 1월 설립. 설립배경 :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활동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및 연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을 통해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행복한 창조도시 구현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이러한 문화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두 차례 정도 운영하겠다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또한 문화정책의 민·관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으며, 광주 미래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예술인들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데 위원회의 설립에 관련된 공청회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고, 설립 후에도 위원이 60여명이나 된다는데 그 명단조차 개인정보 운운하며 공개하기를 꺼린다 하니 **과연 현장의 예술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의지가 있는지, 민·관 가교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겠다는지 듣고 싶다.**

광주문화재단이 설립 시 당시 시장의 홍위병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현시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민선7기 전반기 문화정책에 대한 소고

조 인 형(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들머리: 지역문화정책 핵심은 창작활성화와 예술향유 확대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범위의 문화에 대해 정의함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문화 관련 토론들에서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다. 문화는 삶의 체계, 생활 방식의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하고 가장 **좁은 의미로 예술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되기도 한다. 필자는 **지역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역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에 기반한 지역 예술진흥과 지역민의 향유권 제고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예술(가)에만 국한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제언: 이해관계자의 비전, 목표, 목적, 가치의 공유

미래에, 2020년의 예술현장을 기록한 증명사진과 2020년의 정책(성과)을 기록한 텍스트가 동일한 정체성을 갖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현장과 정책 또는 행정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고, 목적이 다르면 접근이 다르고 해법 역시 달라질 수 있기에 떠오르는 단상이다. 사진과 기록이 동일한 실체라고 지목할 수 있으려면 비전과 목표, 목적, 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다. **예술가와 향유자, 문화행정가(기관)**이 광주문화에 관한 동일한 상(비전)을 구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문화예술 500인 캠프) 또는 연찬회** 등 대면형 소통구조의 형성을 촉구한다.

지역 수요: 기초예술 생태계 육성 및 발전

기초예술 생태계 육성과 발전전략의 강화가 필요하다.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지원)**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연습실, 작업실 등 **공간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설 구축 및 임대료 지원** 등의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예술을 정면으로 다루는 담론의 형성을 위하여 비평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비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이미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민간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겠지만,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되어버렸다.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대표적인 영역이 비평기능의 도입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책변화: 예술가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에 기초

예술가로서 삶이 불가능(이순학 대표)하다는 것은 반례가 있다고 눈을 감아버릴 문제가 아니다. 사회·경제적 충격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예술(가)라는 사실은 이제 DNA 정보로 체화되어 있다. 이 어려운 와중에, 코로나 19는 예술과 관련된 소득원을 소멸시키는 괴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삶의 고단함을 심화시켰을 뿐 근본 원인인 것 같지 않다**. 다시 말해서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예술(가)의 경제적 취약성은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 이는 일시적인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예술생태계 강화와 방향을 달리하는 정책들이 등장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정책의 변화는 현장예술계와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질문

① 미래지향형 정책은 육성·발전시킬 분야를 특정하고 집중지원 하기보다 예술계와 그 구성원들이 활동하고 흥망성쇠의 역사를 만들어 내는 장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생태계 구축, 공존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순학 대표**께서 말씀하신 **공존을 위한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이 합의해야 할 원칙적인 철학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② **김지원 실장**께서는 **광주시와 광주시 문화행정 중간조직의 지역예술(가)과의 소통수준**(제가 보기에는 의견수렴과 반영에 있어 속도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에 대해 간략히 **자평**해주시기 바랍니다.(정책사업의 나열이 아닌, **주관적 느낌**이 중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③ **답변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미래에 지역예술 중핵기관으로서의 전당과 지역예술계의 소통에 기반한 창작 활성화를 위한 개인적인 바람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당에서의 예술활동에 대한 지역예술가의 애로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비매품>**
2020생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 포럼) **자료집**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주
펴낸일 . 2020. 6. 24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20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